

· 해설 내용은 개정된 법령(2022. 7월 기준)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. 지방자치론 전체 기출문제(2012~2021년)는 네이버카페 '김재준 행정학'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문 1.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로 보기 어려운 것은?

-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비중
- ②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
- ③ 전체공무원 대비 지방공무원 비율
- ④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율

문 2.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에 대한 집행기관의 통제수단이 아닌 것은?

- ① 재의요구권
- ② 서류제출요구권
- ③ 제소권
- ④ 선결처분권

문 3.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기준에 의한 시·도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시·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
- ② 시·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한 사무
- ③ 국가와 시·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·조정 등의 사무
- ④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·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

문 4. 협력적 정부 간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원인이 아닌 것은?

- ① 비선호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 간 부정적 외부효과가 증가하고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 간 하위목표와 정책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.
- ③ 신중앙집권화 경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 되고 있다.
- ④ 광역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. ②

· 조세의 종류로 조세의 양적인 측면을 비교하기 어렵다.

2. ②

· 서류제출요구권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수단이다.

※ 지방자치법 제48조(서류제출요구) 제1항: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3. ②

·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제1호: 시·도의 사무

가.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

나. 시·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

다.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·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

라. 국가와 시·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·조정 등의 사무

마. 시·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

바.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

4. ③

· 협력적 정부 간 관계의 중요성은 신지방분권화 경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커짐에 따라 발생한다.

문 5. 세외수입의 특징이 아닌 것은?

- ① 세외수입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.
- ② 세외수입은 응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.
- ③ 세외수입은 종류가 많고 그 수입근거와 형태도 다양하다.
- ④ 세외수입은 지역별, 연도별로 차이가 크다.

문 6.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, 시, 군, 구이다.
- ③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.
-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문 7. 지방공공재 공급에 대한 티보(Tiebout)의 가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- ① 주민들은 이주할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할 때 규모의 경제효과를 고려한다.
- ②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.
- ③ 상이한 가격(조세)으로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.
- ④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.

문 8.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가 존재한다.
- ③ 기준인건비제는 기존의 총액인건비제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-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정답 및 해설

5. ①

-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이지만 대체적으로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.

6. ③, ④(기존 정답: ③)

- ③ 지방자치법 제2조 2항: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,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.
- ④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(2022. 1. 13.)됨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2장에 규정되었다.

정답 및 해설

7. ①

- 티보 가설에 따르면 규모의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.(규모수익 불변)

8. ④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: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,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※ 2022 기준 안전행정부 → 행정안전부로 조직개편

문 9.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부담은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② 단체위임사무의 국가 감독은 기관위임사무에 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.
- ③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감독은 합법성 위주의 감독이다.
- ④ 단체위임사무에 따른 배상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이다.

문 10.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정 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.
- ③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대책임을 진다.
- ④ 지방채의 발행, 원금의 상환, 이자의 지급, 증권에 관한 사무 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문 11. 지방의회의 지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ㄱ. 의사결정기관	ㄴ. 입법기관
ㄷ. 비판·감시기관	ㄹ. 헌법기관

- ① ㄱ, ㄴ
- ② ㄷ, ㄹ
- ③ ㄱ, ㄴ, ㄷ
- ④ ㄱ, ㄴ, ㄷ, ㄹ

문 12.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방식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?

- ① 시·도의 자치사무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감사
- ② 확정된 예산에 대한 시·도지사의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
- ③ 시·도가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
- ④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시·도지사의 직무해태 시 주무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

정답 및 해설

9. ①

- 지방재정법에 따라 단체위임사무는 부담금, 기관위임사무는 교부금이 원칙이다.
- 지방재정법 제21조 제1항: ...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.
-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: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.

10. ②
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: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- 공용·공공용시설의 설치,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, 천재·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,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,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

정답 및 해설

11. ④

- ㄱ. 지방자치법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제1항: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ㄴ. 지방자치법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제1항 제1호: 조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(입법기관)
- ㄷ. 지방자치법 제40조(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), 제41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등으로 집행기관을 감사·비판한다.
- ㄹ. 헌법 제118조 제1항: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.

12. ②

- ② 재정적 통제에 해당한다.
- ①, ③, ④ 운영상의 통제에 해당한다.

※ 2022년 기준 안전행정부는 행정안전부로 조직개편

문 13. 제3섹터 방식의 지방공기업 설립배경이 아닌 것은?

- ① 공공부문의 자금부족
- ② 민관협력부분의 확대
- ③ 공공영역의 기업화 경향
- ④ 공공성의 강화

문 14. 지방자치법상의 기구 중 참여당사자를 기준으로 볼 때 성격이 다른 것은?

-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
- ② 행정협의회
- ③ 지방자치단체조합
- ④ 시·도지사협의회

문 15. 대도시 자치구 폐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“대도시 정부도 다른 지역과 같이 2계층이 되어야 한다.”는 형평의 논리에서 출발했다.
- ② 인위적인 구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수 없다.
- ③ 많은 국가에서 대도시 지방정부는 그 일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위 지방정부를 두지 않고 있다.
- ④ 광역행정을 실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일상적 행정수요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.

문 16.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의회의 관여가 이루어진다.
- ②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를 동시에 가지는 사무이다.
- ③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.
- ④ 예방적 감독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.

정답 및 해설

13. ④

· 제3섹터 방식의 지방공기업은 민관공동출자방식의 지방공기업으로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. 공공성이 강조되는 영역은 지방정부가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.

14. ①

·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당사자이다.

※ 지방자치법 제187조 제1항: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.

· ②, ③, ④ 참여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로만 이루어진다.

정답 및 해설

15. ④

· 광역행정의 실현은 지역주민에 대한 일상적 행정수요의 대응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.

16. ③

· 단체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사무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다.

문 17.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소송제도의 제도적 보완장치이다.
- ②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제도는 직접발안의 형태가 대부분이다.
- ③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.
- ④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관리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.

문 18.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- ③ 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·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
문 19.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공서비스는 비경쟁성을 특징으로 한다.
- ② 공공서비스는 많은 경우 배제성을 지니지 않는다.
- ③ 무임승차는 비배제성보다는 비경쟁성과 관련이 있다.
- ④ 순수한 공공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.

문 20.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폐지와 설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와 설치에 법률로 정한다.
- ④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정답 및 해설

17. ②, ③(기존 정답: ③)

- ① 주민소송제도가 주민감사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다.
- 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(2022. 1. 13.)되면서 조례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의 청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서 하던 것에서,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하게 되었다. 즉 직접발안의 형태로 바뀌었다.
- ④ 주민투표법 제3조 1항: 주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특별시·광역시·도 선거관리위원회가, 자치구·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구·시·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.

18. ②, ④(기존 정답 : ④)

- ② 지방자치법 제29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※ 지방자치법이 개정·시행(2022. 1. 13.)되면서 규칙의 제정범위가 넓어졌다.
- ④ 지방자치법 제33조 제4항: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정답 및 해설

19. ③

- 무임승차문제는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의 소비를 제한할 수 없는 비배제성과 관련이 있다.

20. ①

- 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: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